+

# 철도공사, 재생에너지 생산 최대치 대비 0.6% 불과

5년 전기요금 2조2천억…영업적자보다 많아 정준호 "서남권 RE100 등 연계 강화 필요"

한국철도공사의 전기요금이 영업적자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공사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생산 가능 최대치 계획 대비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 준호 의원(광주 북갑)이 22일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공사가 최근 5년 간 (2021년-20 25년 6월) 납부한 전기요금액 은 2조2천199억원에 달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생산은 3.1 GWh로 생산 가능 최대치 485

GWh 대비 0.6%에 그쳤다.

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총 영업 적자는 2조598억 원으로 전기요금액 규모보다 적었다. 영업 적자의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 비용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철도공사의 부채 총액은 21조3천106억원이다.

전기요금 요율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철 도공사가 올해 7월 기준 납부한 전기요금 요율은 1 kWh당 221.6원으로 2021년 대비 61.4% 인상됐다.

현재 철도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전기요 금을 약 23% 이상 높게 납부하고 있다. 심야시간 할인을 받지 못하는 데다, 철도공사의 전기요금 단가는 일반기업과 달리 산업용으로 책정돼 있 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하는 한국전력과의 협의가 필요

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전기요금 절감 방안으 로 태양광·풍력발전 등 철도공사의 자체적인 재 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공사 자체 분석에 의하면 정부와 공사의 활용 가능한 부지와 건물, 주차장, 방음벽, 선로 등 시설을 최대치로 활용하면 연간 485Gwh 전 력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 철도공사 생산 전기 단가 200원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천1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을 철도

운행에 도입하면 연간 124Gwh 전기를 생산해 약 2 6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서 남권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이 포함된 만큼 철도공사는 자체적인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와 서남권 재생에너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자체 생산 재생에너지는 철도공사의 적자와 기후환경 문제를 함께 해 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과거사 정리 기본법'개정 촉구 22일국회본청앞에서 열린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촉구범시민사회기자회견에참석한여야의원 들과 국가 폭력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이 과거사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해안사구, 관리기준 부재로 훼손…대책 시급

2016년 기준 189개 중 관리지역 6개 뿐 서삼석 "사구 보존·관리 법·제도 정비를"

연안에 모래가 쌓여 형성된 해안사구가 관리 기준 부재로 훼손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변 후면에 쌓여 형 성된 언덕으로 폭풍이나 해일 시 어촌을 보호하 는 자연 제방 역할을 하고 지하수를 통한 용수 공급 기능도 수행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 안)이 22일 해양수산부·환경부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내 해안사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장 최근 조사 자료는 2017년 연구조사로 이마저도 법정 통계가 아닌 상황이다.

그나마 9년 전인 2016년 기준 국내 해안사구 는 189개로 그중 전남이 58개로 가장 많았다. 이



어 충남 42개, 강원 30개, 인천 18개, 제주 14개, 경북 12개, 전북 7개, 부산 4개, 경기 2개, 경남 2개 순이다. 그러나 현 재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관리하는 해안사구는 3% 수

준인 6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사구 관리가 부실한 원인으로는 총괄 주 무부처의 부재가 꼽힌다.

해안사구는 환경부,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일부 소관 업무를 맡고 있으나 법령상에 '해안사구'라는 명칭이 직접 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 관리사업조차 마 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국가유산청이 신두리 해안사구를 문 화유산으로 지정해 2016-2025년 약 351억원을 투입했지만 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 구나 해안사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전남은 예산 투입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훼손은 더욱심각한상태다.

2017년 기준 전체 189개 해안사구 중 절반이 넘는 96개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1950년 대 미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당시 사 구 면적은 79.4㎢였으나 약 50년이 2016년에는 50.4㎢로 줄어 29㎢(3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정확한 면적조차 파악되 지 않고 있다.

실제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남해군에 존재했던 해안사구 2개는 현재 모두 훼 손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도 해안 사구의 824%가, 동해의 경우 최대 41.9m의 백사장 이 사라지는 등 국토 손실 사례도 보고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안사구는 국토 해안선과 배후 지역을 보호하는 자연 방어물이자 담수 저 장소,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보존・ 관리 지침 마련과 이용 시 피해 최소화 가이드 라인 정비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관리 주체를 명 확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이개호 "전통 발효식품은 소중한 문화유산"



#### /🔼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 장성)은 22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를 일반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려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개편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 다"고경고했다.

'식품공전'이란 식품 안전을 위한 기준과 규 격을 다룬 식약처의 공식 문서를 뜻한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 약처가 김치를 초콜릿・코코아 가공품 등과 유 사한 '농산가공식품류'로 묶고,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된장·간장·메주 등의 장류를 개량식품



과 통합하려는 발상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

이 의원은 "김장 문화가 20 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됐고, 장 담그기

역시 2024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며 "전통 발효식품은 단순한 식자재가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 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 재 해당 개편안은 용역 연구 진행 단계에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렴해 신 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수기자

### 문인 북구청장 "연내 사퇴 후 광주시장 출마"

#### "광주시 재정 건전성 회복 급선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올해 안에 사직서를 제 출하고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 한다.

문 북구청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연말 안 에 (공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북구청장은 "10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 리가 많아 고민하기도 했으나, 내년도 국비 확 보가 중요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국비 확보 작업을 잘 마무리한 후 출마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선거사무소는 동·서·남·북 을 아우르는 상무지구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세부적인 (정책과제) 발표가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북구청장은 사퇴 이후 구정 공백 우려에 대해 "국·과장 등 조직이 안정돼 있어 시스템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북구청장은 광주시 최 우선 현안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꼽았다. 그는 "현재 부채 비율이 24% 수준으로 2 5%를 넘기면 '재정 주의' 단 계에 들어가 지방세 납부조

차 어려워질 수 있다. 산업 유치와 세수 확충이 병행돼야한다"고대책을제시했다.

영광 출신인 문 북구청장은 광주시의회 사무 처장, 광주시 기획조정실장·행정부시장, 서민 금융진흥원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재선 북 구청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내년 광주시장 선거는 현직 강기정 시 장을 비롯해 문인 북구청장, 민형배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 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 이형석전 국회 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 당 위원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은진 기자



+